

## 금융자율화란 무엇이며 금 융 문 헌 ㅅ

### 차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 헌 법 헌 영 영 를 미 칠 것 인 가 ?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걷어들여 조달한 재정으로 각종 정부지출을 통하여 조세에 의하여 감소된 국민소득보다 훨씬 많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창출하는 재정정책을 씌으로써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 케인즈(Keynes)는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재정정책을 펼쳐 함으로써 1930~4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러한 재정정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온 통화주의자(Monctarists)들은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실행함으로써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시키려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정책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을 변화시켜 그 영향이 실물부문에 전달되어 총생산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융정책의 지표를 무엇으로 삼느냐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정책 당국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놓고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따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금융부문을 실물부문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이자율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케인지안(Keynesian 케인즈의 추종자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급격한 이자율의 변동은 금융 및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율은 어디까지나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자율 그 자체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금융정책의 지표를 이자율로 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에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있고 이 양자간에는 괴리가 크다. 여기서 명목이자율이라함은 명목화폐가치에 의하여 측정된 이자율이며 실질이자율이란 명목이자율로부터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카바하기 위하여 높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때의 이자율이란 명목이자율이 아닌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만일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이를 낮출 목적으로 통화량만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은 하락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 물가를 자극하여 명목이자율이 높아져 전체 이자율은 더욱 상승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량과 이자율사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유동성효과(Liquidity effect)로서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화폐의 가격에 해당되는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은 역(逆)의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가격효과로서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격효과는 통화량과 이자율이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과연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위에서 말한 두가지 효과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이자율의 불안정한 면을 중시하는 통화주의자들은 금융정책의 지표는 이자율이 아닌 통화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금융정책의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경제정책을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정책의 지표를 통화량에 둘 것인가, 이자율에 둘 것인가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정책의 효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한 금융정책은 주로 은행의 여수신 금리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재할인율(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게 대출해 줄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자기은행돈을 빌려다 쓰라는 광고를 낼날이 머지않았다. 은행에서 대출 코미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꿈같이 들릴지 모르나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1단계 금리 자유화를 단행하였는데 지금까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모든 여수신 금리를 통제하

던 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여신 부문에서는 당좌대월, 상업 및 무역 어음 할인, 연체대출, 보증어음 매입에 대한 이자율을 자유화하였고, 수신부문에서는 은행CD, 상업 및 무역 어음매출, 3년 이상의 장기 수신 등을 자유화 하였다. 이어서, 1993년 8월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고, 11월에는 제2단계 금리 자유화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여신부분은 정책금융을 제외한 1, 2금융권의 모든 여신이 해당되었고, 수신부분은 2년이상 장기 수신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원래 제3단계 금리 자유화조치는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1995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을 감안한 정치적인 이유로 1994년 11월말까지 제3단계 금리 자유화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진행될 제3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의 골자를 보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농어가 영농자금을 제외한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통하여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까지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화라 하면 대개의 경우 인상을 의미하므로 대출금리 자유화에 의한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정책금융자금의 대출금리를 년리 9%(은행 우대금리와 같은 수준)이내로 제한하고 앞으로 점차 상향조정하여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지금까지 정부가 금리를 일일이 정해주던 제도를 벗어나 은행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정함으로써 정책금융을 소멸해 나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야말로 "시민 여러분 제발 우리 은행 돈 좀 빌려다 쓰십시오. 우리 은행의 대출 이자는 전국 은행중에서 가장 싼 연리 3%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와 같은 광고가 나올 날

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이러한 금리 자유화가 과연 축산업부문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금리 자유화 시대가 도래하면 은행서비스는 지금보다 개선되고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우려되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말한 정책자금 금리 자유화 대상에서 영농자금은 제외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농가에게 대부되는 영농자금은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특히 축산 농가는 단기성 영농자금보다는 장기성인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축산시설 등 축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에 대한 금리는 상승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이는 바로 생산비 인상으로 직결되어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쉽게 전망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축산물 생산비 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미미하므로 금리자유화 영향이 별 것 아니라 할지 모르나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 자기가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높아져 생산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생산비라함은 경영주 자신이 조달한 생산요소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축산업과 관련되는 은행 즉 농·축협이 과연 이러한 금리 자유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농·축협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실수요자인 농가에게 전달해 주는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 그나마 경영수지를 맞추어 왔지만 금리의 완전 자유화가 달성되고 정책자금이 자취를 감추고 나면 농·축협의 활동 무대는 그만큼 줄

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농·축협이 없다면 다른 은행에 가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나 이는 농업금융에 자본제한현상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농업금융의 자본 제한 현상은 농민 스스로 농업투자에 대한 자본의 한계수익률을 낮게 책정하는 나머지 자금의 대부를 꺼려하는 내적 자본현상 이외에도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자연 재해나 시장가격 변동 폭이 커 외부로부터 농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꺼려하는 외적 자본제한 현상도 있다. 따라서 농·축협이 없다면 그 일을 다른 일반은행이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갖기 어렵다. 설령 다른 은행이 농민에게 대출을 해 준다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큰 만큼 금리는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금융의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농업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이 아닌 특수은행(농·축협)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세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자율의 상승에 의하여 물가의 상승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물가시대를 맞아 축산업자들이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금융자유화는 예정되어 있다. 누구도 개인의 힘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축산업자들은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조합금융의 육성이다. 조합금융이라함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여유있는 분산적이고도 단기적인 자금을 동원하여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해주는 호혜금융이다. 따라서 조합금융은 철저한 신용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에게만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축산업자들이 이제는 지역축협이나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뭉칠 때이다. 

